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원장 사퇴 협박, 방송장악 음모의 시작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한달이 겨우 지난 시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데자뷰인 듯한 음모가 시작되고 있다.

조선일보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보도가 나오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바로 국힘당 미디어특위가 한상혁 위원장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심지어는 좌파의 견해를 전파시키려는 데 앞장서왔다는 극단적 표현까지 담았다.

2020년 7월 한상혁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힘당 의원들이 요구한 모든 부동산 자료를 제출했지만 국힘당 의원 중 어느 누구도 이 농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없다. 그러다 느닷없이 보수 언론의 검증되지 않은 보도를 받아 비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하는 국힘당의 행태는 남부럽지 않는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분노를 느낀다.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좌파 운운하며 중립이 가장 중요한 방송산업을 진영의 논리로 몰아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속내는 뻔하다.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위원장은 무조건 사퇴하라’, 그리고 ‘우리가 방통위를 손아귀에 넣어 방송을 좌지우지 할 것이다’는 것이 그들의 속내다.

국민은 지난 보수정권의 방송 장악의 맹위를 떨쳤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

한다. 방송이 집권당의 하수인으로 전락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추락하고 만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권세력의 방송장악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의 역사가 이를 입증해 주었다.

이 모든 일의 뒤에는 한상혁 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 배제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공정의 외피 속에 숨긴 불공정과 반칙이 있다. 이 치졸한 방송장악 꾀판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무능에 이어 치졸한 협박을 펼치고 있다.

국힘의 표현대로라면 좌파 위원장을 몰아내고 우파 위원장을 그 자리에 심겠다는 것인지, 사퇴를 위한 편파적 좌판을 깔고 있다. 역사를 다시 뒤로 돌리려는 국힘의 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두려워하지 마라.

어떠한 사퇴 외압과 회유, 협박이 있을지라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것이 역사가 부여한 방통위원장의 임무다.

2021년 6월 16일

21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위원 일동
(김상희, 변재일, 우상호, 윤영찬, 이원욱, 이용빈, 전해숙, 조승래, 조정식, 정필모, 홍익표)